

## 정신건강정책 ‘예방-치료-회복’ 쉼 단계 관리로 대전환

- ‘100만 심리상담’부터 ‘고용·주거 지원’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-

### 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】

- ◇ 비전: 정신건강정책 대전환, 예방부터 회복까지
- ◇ 목표: ‘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, 10년 내 자살률 50% 감축
- ◇ 예방 강화: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,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
- ◇ 정신응급 입원 병상 확보, 자·타해 위험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
- ◇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, 주거·고용 지원 확대
- ◇ 매년 학생, 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, 대국민 캠페인 강화
- ◇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설치

### <요약본>

정부는 12.5.(화)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‘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’을 발표했다.

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\*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\*\*해지고 있다.

\*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: (‘18) 26.6명 → (‘22) 25.2명, OECD 평균 10.6명(23.9. 최신자료 기준)

\*\* 정신질환 수진자 수(치매 포함, 만명) : (‘15) 289 → (‘17) 321 → (‘19) 368 → (‘21) 411

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종종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·요양에 편중됐고,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·수동적 대처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,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.

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“정신건강정책 대전환, ‘예방부터 회복까지’”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\*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.

- \* 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, ②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 
③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, ④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



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,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## <상세본>

‘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’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.

<b>비전</b>	<b>정신건강정책 대전환 - 예방부터 회복까지 -</b>
<b>핵심 목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</li> <li>■ 10년 내 자살률 50% 감축</li> </ul>

### 4대 전략 및 핵심과제

<b>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</b>		<b>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</li> <li>■ 청년·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 개입</li> <li>■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</li> <li>■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신응급대응 강화</li> <li>■ 입원제도개선, 수가인상 등 의료질 향상</li> <li>■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</li> <li>■ 마약치료기관 확충·운영 활성화</li> </ul>	
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	('21) 12.1% → ('30) 24% (2배 증)	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	('21) 186.6일 → ('30) 90일 이내 (50% 감)
<b>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</b>		<b>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</li> <li>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·주거 지원</li> <li>■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지원 강화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</li> <li>■ 자살예방교육(의무) 1,600만 명 실시</li> <li>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·운영</li> </ul>	
정신장애인 고용률	('21) 10.9% → ('30) 30% ( '22. 발달장애인 고용 수준)	“정신질환자 위험” 인식	('21) 59.6% → ('30) 30% (50% 감)

4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.

## 1.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

① (국민 마음투자) '24년 8만 명,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.

\* '24. 중·고위험군 8만 명(1인당 60분 8회) → '27. 50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

-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·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, 조기에 치료한다.

※ 영국 IAPT(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,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)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비용 대비 편익은 1:3.6으로 평가

② (정신건강 자가진단·관리 활성화) 카카오톡,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\*를 연계하여,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.

\* '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(Mentalhealth.go.kr)' 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, 불안장애,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

③ (자살예방교육 의무화)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·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('24.7.~)한다.

- 학생,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\*을 실시하고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\*\*을 실시한다.

\* [인식개선교육] 생명의 가치, 자기 이해와 돌봄, 도움 요청 방법 등

\*\* [생명지킴이교육] 자살위험요인·경고신호,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

④ (긴급전화 및 SNS상담 도입)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, SNS상담을 도입한다.

\* 자살예방상담(1393), 정신건강상담(1577-0199), 청소년상담(1388) 등을 대체하여, 109로 통합 안내

-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('23년 80명 → '24년 100명)하고,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(문자, 메신저 등) 상담을 도입한다.

## 1-2.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

- ① (정신건강검진 확대) 청년층 ▶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(우울증 → 우울증, 조현병·조울증 등)하고, ▶검진주기를 단축(10년 → 2년)한다.

### < 참고 : 현행 제도 및 개선(안) 비교 >

구분	현 행	개선(안)
대상	20-70세 성인	청년층(20~34세) 대상 우선 확대
검사질환	우울증	우울증, 조현병, 조울증 등
검진주기	10년	2년
사후관리	부족	정신건강복지센터,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, 정신건강의학과 연계

- ② (대학 내 지원 강화)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 지원을 강화하고,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‘(전문)대학기관 평가인증’에 반영한다. **교육부**

\* 서울대(대학생활문화원), UNIST(헬스케어센터) 등 전문심리상담사 및 정신과 전문의 채용하여 정신건강 관리·치료 중

- ③ (직장인 마음건강 관리지원)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. **고용부**

- 근로자 건강센터(50인 미만 대상,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) 및 근로복지넷(300인 미만 대상)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,
-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(EAP)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기업 포상,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.
- 중대산업재해 경험자·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\*한다.

\* ('23년) 14개소 → ('24년) 23개소 확대 추진(+9개소)

- ④ (실직·구직자 지원)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·구직자 대상 진로,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. **고용부**

\*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~3명 상주, 1인당 최대 6회 지원

## 2.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

① (응급입원 대응 강화)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·확대한다.

-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·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\* - 경찰관 합동대응센터\*\*를 설치한다. 경찰청·복지부

\* 위기개입팀 확충('23. 204명 → '24. 306명)      \*\* 현재 서울(1), 경기(2) 설치 중

- 외상·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('25년 전국 확대)하고,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.

\* 정신응급병상 : ('23) 139병상 →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 추진

② (의료 질 향상)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.

- 폐쇄병동 집중관리료, 격리보호료 등 인상\*('24.1월~), 치료수가 신설 보상\*\*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.

\* 상급종합병원 수가 95% 인상(집중관리료 23,670원 → 47,030원, 격리보호료 59,520원 → 118,260원)

\*\* (예시)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, 치료 수가(작업 및 오락요법) 급여기준 개선 등

-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.

③ (지속치료 유지)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\*의 정규수가화,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\*\*한다.

\*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(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) 및 낮병동 지원조건 다양화(6시간 이상 이용 시만 적용 → 6시간 미만 수가 신설)

\*\*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%이나,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

④ (위험환자 치료중단 방지) 자·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「외래치료 지원제」\*를 활성화하고,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.

\* 시·군·구청장이 자·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,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

- 특히, 자·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연계(의료기관→정신건강복지센터)·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.

\* 현행법상 가능(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)하나 미활용

### 3.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

① (복지서비스 확대)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·확충한다.

-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,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.

- WHO 권고(동료지원센터, 지원주택 등)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한다.

\* 최초 추진 중인 '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'('23.10.~'24.3.)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

② (정신요양시설 개편)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,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

- 또한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(8천 명, '24년~)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(노인/장애인/정신재활시설)로 재배치한다.

③ (고용·주거 지원)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.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상 '취약계층'\*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,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. 고용부·복지부

\* 취약계층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가·부처의견 통해 범주화(고용부, 복지부)

-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'특화형 매입임대주택'을 공모('23년,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)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. 국토부·복지부

④ (권리보호 강화)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.

-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 금융위하고, 자격취득 제한(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)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.

-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(PAD: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)\* 도입을 검토하고,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(정신요양원입소자 → 지역사회 거주자)한다.

\*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, 희망 치료기관·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



## 4.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정책 추진 기반 마련

① (인식개선)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.

- 대학동아리,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, “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”, “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”라는 편견을 해소한다.
- 언론계와 연계하여, ‘언론보도 권고기준’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.

② (정책추진체계 정비) 「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」 구성·운영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.

-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·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\* 논의과제(안) : 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,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, 사회복귀 로드맵 등

- ▶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, ▶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**가칭**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추진한다.

③ (인력 확충)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.

- 「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」 결과(~12월)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.

\* ('23) 19.4천 명 → ('27) 22.8천 명(+3.4천 명)까지 단계적 양성 추진

-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
\*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: ('23) 25명 → ('25) 22명 목표

\*\* 인건비 단가 : ('24) 38.4백만 원 이후 단계적 인상 추진



<붙임> 1. 정신건강정책 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

2.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과제 목록

<별첨> 「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」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전명숙 (044-202-3860) 김경찬 (044-202-3862)
<정신의료, 자기진단·인식 개선, 정신재활, 비자의입원제도>	정신건강정책과	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	서기관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	도혜진 (044-202-3866) 최종천 (044-202-3861) 홍명기 (044-202-3864) 김유현 (044-202-3858)
<국민마음투자 .중독치료 지원 등>	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	김승일 (044-202-3870) 배홍철 (044-202-2531) 김준범 (044-202-3872) 강현진 (044-202-3871)
<자살위험군 지원 등>	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	책임자  담당자	과 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	이두리 (044-202-3890) 김지윤 (044-202-3891) 김명희 (044-202-3892) 정호진 (044-202-3899) 조연희 (044-202-3893)
<보상강화>	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정성훈 (044-202-2730) 배윤영 (044-202-2745)
<장기지속형 주사>	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우경미 (044-202-3090) 김행미 (044-202-3097)
<정신장애인>	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한영규 (044-202-3320) 박영호 (044-202-3328)
	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모두순 (044-202-3340) 유운용 (044-202-3350)
<학생 상담지원, 마음챙김 등>	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연구관	정희권 (044-203-6877) 김용준 (044-203-6544)
	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김도형 (044-203-6972) 김도균 (044-203-6983)
<대학 상담센터>	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박성하 (044-203-6820) 송성윤 (044-203-6960)
<교원 정신건강>	교육부 교원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연구관	신진용 (044-203-6480) 김명련 (044-203-6487)
<학교 밖 청소년, 1388>	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 사무관	남상희 (02-2100-6271) 최도연 (02-2100-6277) 김경희 (02-2100-6276)

<원스톱 지원체계>	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조 린 (02-2100-6311) 사무관 오주운 (02-2100-6318)
	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성철 (02-2100-6231) 사무관 박혜원 (02-2100-6238)
<근로자 정신건강>	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	팀 장 권구형 (044-202-8890) 사무관 나상명 (044-202-8893) 사무관 류경호 (044-202-8892)
	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	과 장 김정연 (044-202-8870) 서기관 황규석 (044-202-8872) 사무관 김송이 (044-202-8873)
	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	책임자 담당자	팀 장 박완근 (044-202-8990) 사무관 최정운 (044-202-8820)
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박종환 (044-202-7526) 사무관 한형진 (044-202-7539)
	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	책임자 담당자	팀 장 윤혜영 (044-202-7070) 사무관 이 현 (044-202-7559)
<재 취 업 지 원>	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이병성 (044-202-7327) 사무관 이계승 (044-202-7333)
<정신장애인 고용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이부용 (044-202-7481) 사무관 조은비 (044-202-7482)
<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확대>	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이재국 (044-202-7425) 사무관 조일한 (044-202-7420)
<주거지원>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도곤 (044-201-4530) 서기관 류경진 (044-201-4533)

## 달라지는 모습




**□ [전략 01]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**

정책과제	세부과제
1-1.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	1-1-1.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도입
	1-1-2. 마음건강 문제를 일상적으로 점검·발굴하는 체계 구축
1-2. 청년·학생 검진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	1-2-1. 청년·대학생의 마음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지원 인프라 강화
	1-2-2. 초·중·고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체계 강화
	1-2-3. 위기학생·청소년 대상 지원 강화
1-3.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 지원	1-3-1. 근로자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
	1-3-2. 직장 내 근로자 마음건강 지원체계 강화
	1-3-3. 정신건강 고위험직군에 대한 보호 강화
	1-3-4. 구직·창업자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
	1-3-5.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
	1-3-6. 군·경찰·소방 등 특수직군 마음건강 지원
1-4. 자살 위험군 지원 강화	1-4-1.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및 SNS 상담 도입
	1-4-2. 자살유발정보 즉각 대응 및 확산 차단
	1-4-3.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

**□ [전략 02]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**

정책과제	세부과제
2-1. 정신응급대응 강화	2-1-1. 정신응급 현장 대응 체계 구축
	2-1-2. 정신응급 입원 인프라 구축 및 확대
2-2. 입원제도 개선 및 치료 질 향상	2-2-1.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강화, 환경개선 지원
	2-2-2.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질 제고
	2-2-3.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제도 개선방안 마련
2-3. 외래치료지원제 등 퇴원환자 지속치료 활성화	2-3-1. 퇴원 후 체계적인 지속치료 환경 조성
	2-3-2. 자·타해 위험환자의 치료공백 최소화
2-4. 중독치료·재활 인프라 확충	2-4-1. 마약·알코올 등 중독치료 활성화
	2-4-2. 중독재활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중독 연구지원 강화

□ [전략 03]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

정책과제	세부과제
3-1.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체계 전면개편 및 확충	3-1-1. 정신질환자 복지 확충을 위한 근거 마련
	3-1-2. 정신질환자 거주·이용 시설 혁신
	3-1-3.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
3-2.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·주거 기반 마련	3-2-1.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 지원
	3-2-2.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
3-3.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강화	3-3-1.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해소방안 마련
	3-3-2. 정신질환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

□ [전략 04]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

정책과제	세부과제
4-1. 정신건강 대국민 캠페인 실시	4-1-1.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
	4-1-2. 정신질환 편견해소, 정책 공감대 형성 위한 사회적 노력
4-2. 자살예방·정신건강 교육	4-2-1.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
	4-2-2. 초·중·고생 '마음챙김 및 디지털 리터러시' 교육 도입
	4-2-3. 일상 속의 정신건강 관리 실천법 확산
4-3.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확립	4-3-1.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, 국립정신건강센터 역할 강화
	4-3-2.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행기반 마련
	4-3-3.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, 응급대응체계 확립 위한 인력 확충
	4-3-4.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 확충 및 질 관리